

## 위기의 오리산업 돌파구는

과징금에 계열업체 도산  
오리농가 피해 이어질 것



한국오리협회 계열·유통분과위원회

**이세종** 위원장  
(삼호유향오리 대표)

오리업계를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2019년 원종계 업체들에게 3억2천600만 원을 시작으로 삼계관련 업체들에게 1천88억 원, 토종닭 업계 4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제 남은 업계는 육계와 오리계열화 업체이다. 앞서 원종계, 삼계, 토종닭에 내려진 과징금 액수를 보면 시장규모 면에서 훨씬 큰 육계와 오리업계에 내려질 과징금 액수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로 인해 HPAI를 비롯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가금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계열업체들이 경영난으로 도산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질 경우 소비자들은 결국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오리협회 계열·유통분과위원회 이세종 위원장에게 공정위의 조사와 함께 오리업계의 입장에 대해 들어봤다.



## “벼랑 끝 위기 속 축산법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



### 가금 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조사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은?



지난해 담합행위의 당사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들에게 오리 산업의 특성에 대해 수도 없이 설명했지만 무조건 담합행위로 몰아가는 점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조사과정에서 오리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인 HPAI 발생으로 인해 극심한 불황을 겪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오리고기 소비 급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축산법과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해 수급조절이 이뤄진 것인데 이를 담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특히 수급조절 행위는 단순히 부당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만약 수급조절마저 없었다면 지금 오리업계는 무너져 버렸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어필했다.

오리협회는 가금 단체들은 물론 관련 단체들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등에 이러한 부당함을 적극 알리고 있다.

무엇보다 축산법에는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자조금법에서도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급조절이 이뤄져 왔다.



### Q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미치는 영향은?

A 오리업계는 국내 최초로 2003년 HPAI가 발생 된 이후 거의 매년 HPAI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더욱이 2010년 이후에는 오리고기 소비까지 줄어들면서 오리업계는 침체기에 들어섰다. 그러한 와중에도 HPAI는 지속해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오리업계는 한계 상황에 달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속적인 HPAI 발생으로 인해 규제는 갈수록 강화됐고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사육기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농가들은 오리사육을 포기하고 계열화업체들은 하나둘 무너져 가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까지 부과받으면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계열업체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계열업체들의 도산은 곧 오리 농가에 직격탄으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오리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소규모 계열업체들은 도산의 위기로 몰아가고 결국 자본력이 높은 대기업 계열업체들과 살아남을 것이고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보다 대기업 위주로 산업이 재편됨에 따라 독과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오리산업과 오리 농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오리산업 고사될 것 ”



앞으로 오리 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A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조사가 잘 마무리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오리협회는 농림축  
산식품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  
으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나서  
줄 것으로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급한 불이 공정거래위원회 담합행위 조사이지  
만 근본적으로 오리업계가 당면한 문제는 지속  
해서 발생하고 있는 HPAI에 대한 대책이다.

오리 산업에 있어서 HPAI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HPAI는 오리 산업에 막대한 피해  
를 줬을 뿐만 아니라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 조사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HPAI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과 함께 오리  
고기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오리자조금을 통해 오리고기 소비촉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선  
택과 집중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많이 오리고  
기를 먹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오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동남아  
수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시적  
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정부 차원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